

성명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도서관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미래를 열어갈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이 함께 배우고 꿈꾸고 힘을 키우는 지식 인프라입니다. 도서관은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는 플랫폼입니다. 『2024 서울시 공공도서관 성과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도서관 지속 투자에 대한 지지 점수가 무려 **93.4점**에 달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도서관의 가치를,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인프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움직임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앞둔 「도서관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중대한 정책 변화가, 계류되어 있던 법안(24년 12월 발의)의 '대안'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계는 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❶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도서관 정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40여 개 중앙행정 기관과 전국 광역시·도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단순한 도서관 정책을 넘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려면, 오히려 지금까지 제기된 한계를 직시하고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㉔ 사무국은 범부처를 아우르는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현행 소속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도서관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식 기반으로 기능하려면 도서관위원회 사무국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제도의 껍데기가 아닌, 실질이 살아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도서관이 그 힘을 키우는 토대라고 믿는다면,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위원회의 운영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하십시오.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지식 주권과 공공 지식 생태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2만2천 도서관과 3천만 도서관 등록회원을 대표하여,

2026년 3월 19일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 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서울·인천·경기지구협의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부산·울산·경남 지구협의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전국사서교사노조, 어린이책시민연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경기도 사서협의회, 서울시사서협의회, 경북사서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학교도서관모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재단법인씨앗, 느티나무재단, 한국작은도서관협회, 한국학교사서협회,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그림책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어린이책출판연합, 대한출판문화협회